

한국은행 상해주재원은 2011년 11월부터 상해 금융시장의 특기사항과 국제투자은행의 중국 금융관련 주요 조사·연구 내용 등을 주간 단위로 정리하여 현지 주요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.
내용 문의는 한국은행 상해주재원(tel: 021-5031-7126/7)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차 례 >

금융시장 특기사항

- 중국인민은행, 상하이 FTZ 금융부문 지원조치 발표
- 중국의 경제부문 개혁방안에 대한 IB의 평가

주요기관 발표 및 경제지표 일정

- 중국인민은행, '상하이자유무역구 금융부문 지원에 관한 의견' 발표(12. 2)
- 중국증권감독위, '신주발행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' 발표(11.30)
- 중국증권감독위, '상장회사 감독가이드라인 3호 - 현금배당' 발표(11.30)
- 중국인민은행, 2013.10월중 금융시장동향 발표(11.28)
- 중국은행감독위, '은행금융기관 임원 및 고급관리자 자격 관리방법' 공포(11.27)
- 중국인민은행, 2013. 3/4분기 지급결제시스템 동향 발표(11.26)

국제투자은행의 중국 금융관련 주요 조사·연구 내용

- 지난주 주요 국제투자은행 보고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

《금융시장 특기사항》

1. 중국인민은행, 상하이 FTZ 금융부문 지원조치 발표

□ 중국인민은행은 12.2일 ‘상하이 FTZ의 금융부문 지원조치에 관한 의견’을 발표하여 상하이 FTZ내에서의 자금조달, 위안화 사용, 금리자유화 및 외환관리와 관련된 지원조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음

* ‘关于金融支持中国（上海）自由贸易试验区建设的意见’

○ 동 발표는 은행·증권·보험 감독위가 9.29일 상하이 FTZ출범과 동시에 각각 소관사항에 대한 지원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것으로서 이에 따라 중국당국(一行三會)의 금융부문 지원조치의 기본윤곽이 모두 완성

○ 중국인민은행은 FTZ진출 국내외기업이 일반계좌와는 별도로 ‘거주자자유무역계정’과 ‘비거주자자유무역계정’을 개설토록 하고 이를 통해 FTZ에서 신규로 허용되는 자금조달·투자 등 금융거래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급격한 외환유출입에 따른 리스크 통제수단*을 확보

* FTZ과 해외간 자금유출입은 원칙 자유화하면서도 FTZ과 국내간의 자금유출입은 자금의 국경간 이동으로 의제하고 중점 관리

○ 한편 FTZ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상해시 소재 금융기관들도 새로이 실시되는 금융완화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FTZ진출 기업이 해외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해 증권·파생상품 투자 및 전대대출 등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용도규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은 시장기대를 뛰어넘는 중요한 사항으로 평가

○ 또한 일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의 해외증권 투자 허용, FTZ 기업의 상해지역 증권투자 및 FTZ 기업의 해외모기업에 대한 국내 채권발행 허용 등도 자본자유화 측면에서 큰 진전

○ 다만, 향후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거액CD 도입시 FTZ내에서 우선 실시하고, 여건이 성숙할 경우 소액 외화예금의 금리상한을 폐지한다는 방침 이외에는 금리자유화 측면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어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

- 중국인민은행의 ‘의견’은 FTZ내에서 ① 자금조달·투자 편의 제고를 위한 자본계정자유화 확대 ② 위안화 결제 및 국경간 이동의 편의 제고 ③ 금리자유화 확대 ④ 심사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외환관리규제의 완화 등 크게 4부분의 내용으로 구성

① 자본계정자유화 확대

- FTZ 기업이 대외직접투자(ODI)시 소관관청의 인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은행에서 대외지급 및 환전 가능
- FTZ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은 합법적인 해외증권투자를 포함한 대외투자가 가능
- FTZ내 취업외국인은 비거주자 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증권투자를 포함한 국내투자가 가능
- FTZ내 금융기관 및 기업은 상해지역의 증권 및 선물거래소에서 거래참여 가능
- FTZ 기업의 해외모기업은 국내자본시장에서 위안화채권 발행이 가능
- FTZ 기업, 비은행금융기관 등은 해외로부터 외화차입이 가능
- FTZ 기업중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외증권 및 파생상품 투자가 가능

② 위안화 결제

- 상해소재 은행금융기관은 FTZ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상계정 및 대외직접투자를 위한 위안화결제업무 취급이 가능
- 상해소재 은행금융기관은 지급결제기관과 협력하여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위한 위안화결제업무 취급이 가능
- FTZ 금융기관 및 기업은 해외로부터 위안화자금을 차입하여 증권,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 및 전대대출 불허
- FTZ 기업은 소속그룹 전체의 위안화자금 관리를 전담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수취·지급 업무 수행이 가능

③ 금리자유화

- 기본조건의 성숙정도를 감안하여 금리자유화를 추진
- FTZ내 금융기관중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액CD 도입시 시범금융기관에 우선 포함
- 여건이 성숙할 경우 FTZ내 일반계좌의 소액 외화예금금리 상한을 완화

④ 외환관리규제 완화

- FTZ 기업이 다국적기업의 총자금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환 및 국제무역결제에 대한 규제를 완화
- 외국인직접투자(FDI)의 외환 등기인가를 외국환은행에 위임하여 관리토록 하고 사후감독은 강화
- 금융리스회사의 해외차입업무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
- FTZ 기업이 해외에 지급하는 담보비용의 사전인가제를 폐지 등

< 참고 >

상하이 FTZ 출범 이후 기업 및 금융기관 진출 현황

□ 9.29일 상하이 FTZ 출범과 동시에 25개 기업*이 주로 자회사 형태로 상하이 FTZ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11개 국내외 은행**들도 진출 인가를 획득

* 申银万国선물, 华安미래자산운용, 中国太平洋보험, 大众保險 등 비은행금융기업의 자회사 포함

** - 지점(分行) 설치(8): 4대 국영은행 및 교통은행, 초상은행, 포동발전은행, 상해은행
- 출장소(支行) 설치(2): Citi(花旗銀行), DBS(星展銀行)
- 금융리스회사(1): 교통은행

□ FTZ 출범 이후 10.8일부터 정식으로 기업 설립신청을 받은 이래 11.28일까지 두 달간 5.8만건의 문의와 6,000여건의 기업명칭 심사가 접수되는 등 업무량이 폭증하고 있으나 심사절차의 간소화*로 회사설립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

* 회사설립시 필요한 서류심사기준이 실물제출(实缴制)에서 사실확인(认缴制)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영업허가증(营业执照) 수령에 소요되는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알려짐

○ FTZ 설립 이후 두 달 동안 신규 등록기업은 1,434개이며 이중 외자기업은 38개사*에 달함

* 총 등록자본금은 5.6억달러로 1개사당 평균 1,500만달러이며 지역별로는 홍콩 14개사, 미국 및 일본 각 6개사, 싱가포르 4개사임

○ 금융기관 관련하여서는 국내은행중 上海农商銀行이 FTZ 출범 이후 추가 진출인가를 받았으며 외자은행 10개*가 추가로 인가를 받아 11.29일 현재 12개 외자은행이 진출을 확정하였고 Standard Chartered(渣打銀行), 国泰世华은행(대만) 등은 인가 신청중

* 10.12일: HSBC(汇丰銀行), BEA(东亚銀行) 10.18일: Hang Seng은행(恒生銀行)
11.7일: Deutsche Bank(德意志銀行) 11.15일: 南洋상업은행
11.18일: ANZ(澳新銀行)
11.28일: 도쿄미쓰비시은행, 미즈호은행, 미쓰이쓰미토모은행,
United Overseas Bank(大華銀行)

날짜는 언론보도일 기준

- 인가를 받은 외자은행들은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내년초 이후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

2. 중국의 경제부문 개혁방안에 대한 IB의 평가

(홍콩주재원)

[총 평]

- 홍콩소재 IB들은 중국의 3중전회(11.9~12) 이후 발표한 코뮤니케(11.12), 개혁안 전문(11.15) 및 인민은행(PBoC)의 개혁안 설명서(11.19) 등이 그동안 중국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
 - 대부분 IB들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폭(범위)과 깊이(정도)가 대체로 당초의 예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라고 평가
 - 특히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의 기능을 강화(기본적 역할→결정적 역할)키로 한 것은 향후 개혁추진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 - 다만, 일부(Nomura)에서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수치로 나타내는 목표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으나, 중국의 경우 黨의 역할은 기본적인 정책방향 제시이고 구체적인 정책실행은 정부가 담당하는 특성 때문이라는 견해가 대부분
 - 따라서 동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위험을 줄이고 향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- IB들은 개혁의 성공여부는 향후 정책당국이 구체적 실행방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분석하고, 이와 관련하여 고위급 개혁추진조직(領導小組)을 설치키로 한 것에 대해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한 신 지도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
- 한편, 개혁추진 속도와 관련하여서는 정치·사회적 안정을 중시하는 중국 지도부의 성향과 기득권층의 반발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·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
 -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고용과 직결되는 경제성장률 추이가 개혁의 순서와 속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며, 성장률 목표가 위협을 받게 될 경우 개혁의 경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

- 이와 관련하여 일부 IB들은(Nomura, Citi) 중국정부가 개혁추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내년도 성장률 목표치를 금년보다 낮게 설정(7.5% → 7.0%) 할 것으로 전망

[부문별 평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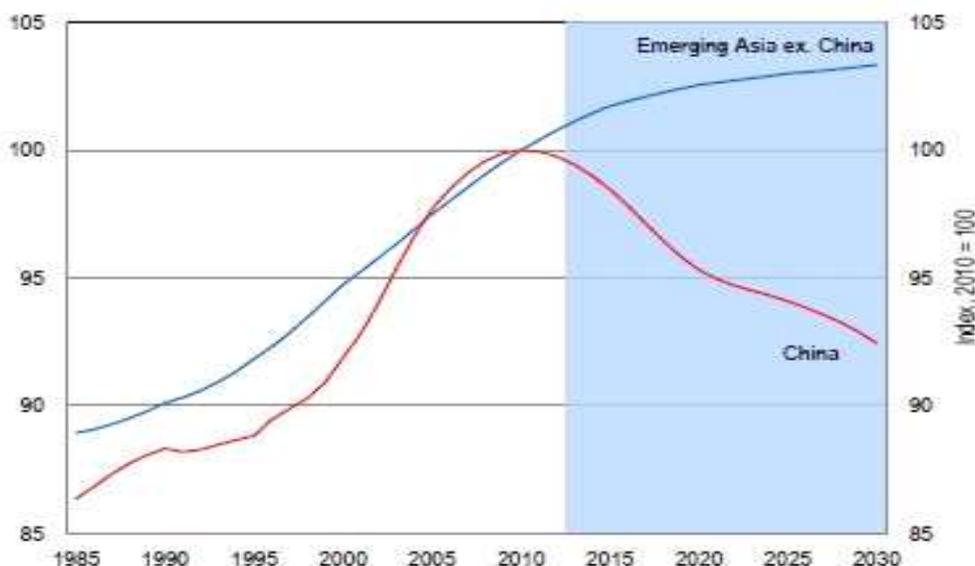
(1자녀정책 완화)

- IB들은 1자녀정책의 완화(부모중 1인이 독자인 경우 2자녀 허용)가 1970년대 후반 이후 동 정책 시행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와 성장잠재력 약화, 연금부담 가중 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*

* Merrill Lynch는 신 지도부의 입장에서 집권초기에 권력기반을 강화하면서 개혁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득권층의 반발이 크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동 과제의 선정이 최상의 선택인 것으로 평가

- Citi는 중국의 총인구 중 노동연령인구(15~64세)의 비율이 지난 15년간 빠르게 상승하였으나 현재 정점에 이르러 향후 20년간 급속히 하락할 것으로 분석하고,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동 기간중 중국의 성장률을 3.25%p 낮출 것으로 추정

중국과 아시아 신흥국의 노동연령인구(15~64세) 비중



자료 : Citi

□ IB들은 그간 1자녀정책의 예외 인정*, 자녀양육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동 정책 전환에 따른 신생아 출산 증가 규모는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연간 1.5백만명 내외**로 중국 출산인구(연간 16백만명 수준)의 10%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***

* 부모 모두 독자, 소수 민족, 농촌 지역(첫째가 딸인 경우), 해외출산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2자녀를 허용해 왔음

** Barclays 1.3백만명, Merrill Lynch 1.9백만명, ANZ 0.9~1.5백만명

*** 중국 정부관계자도 동 정책전환에 따른 일시적 인구 급증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

○ 아울러 동 신생아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기까지 15~20년이 소요되는데다 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가족(부모 또는 조부모)이 직업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실제 노동인력 구조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

□ 한편, 신생아 출산 증가에 따라 관련 부문*의 소비와 투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수(소비) 위주의 성장이라는 신정부의 정책방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

* 각종 유아용품, 의류, 교육, 자동차, 주택 등

○ 자녀 1인당 양육비용(약 79,000달러)을 감안할 경우 동 정책 변경으로 향후 5년간 약 6,000억달러의 지출증가 예상(매년 신생아 1.5백만명 증가 전제)

(국유기업 개혁)

□ 대부분의 IB들은 금번 개혁 청사진에서 국유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데다 국유기업 개혁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동 부문의 개혁은 당초 기대에 비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

○ 동 개혁안에 포함된 국유기업 및 독점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
○ 다만, 국유기업 이익의 정부앞 납입비율 인상(현행 15% 내외 → 2020년까지 30%)은 긍정적으로 평가

□ 이에 따라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은 소유권 등 hardware적 측면보다는 경영방식 개선을 통한 효율성 증대 등 간접적이고 software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
- 특히, 자원배분에 있어 시장과 가격의 기능을 강화키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자원 및 금융자금에 대한 접근성에서 국유기업이 누렸던 우월한 지위가 약화되어 민간기업과 보다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
- 아울러 정부기능 조정과 맞물려 그동안 국가와 국유기업간 모호한 관계에서 벗어나 경영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

(금융 개혁)

□ IB들은 금융부문 개혁내용이 대부분 새로운 과제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재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그동안 인민은행이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금융개혁을 추진해 온 결과라고 평가

- 아울러 금융부문의 개혁 방안은 여타 경제부문(재정, 토지, 국유기업 등)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선진화된 내용이라는 견해(Barclays)

□ 민간은행의 설립 추진은 중소 민간기업들의 금융자금 접근성을 높이고* 은행산업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

* 4대 국유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10~20% 수준인 것으로 알려짐

- 이에 따라 신설되는 민영은행의 주고객은 민간기업들이 될 것이며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

□ IPO제도의 개선방향은 현행 승인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는 현재 정부가 신규상장 대상기업과 그 시기를 결정함으로써 국유기업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주식시장의 수급을 왜곡*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

* 특히, 신규상장은 주로 강세시장인 경우에 한해 허용함으로써 수요가 몰려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

- 다만, 이의 시행을 위해서는 현재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부정 및 오류 문제의 시정이 선결과제인 만큼 관련 법 및 제도 개선과 병행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
□ 금융개혁의 추진시기와 관련하여 IB들은 상대적으로 파급영향이 크지 않은 CD발행 허용, 예금보험제도 도입, QFII 및 QDII 한도 확대, 환율 일일변동폭 확대 등은 비교적 조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

- 위안화 일일변동폭 확대와 관련하여 일부 IB(Barclays)는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을 때 보다는 미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고 미 연준의 tapering 개시는 이러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
- 반면 예금금리 자유화, 자본계정 자유화, 부실금융기관 퇴출제도 등은 금융안정을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

(재정 개혁)

- IB들은 재정개혁이 지방정부 부채, soft budget constraints 및 부동산 버블 등 중국경제의 주요 리스크를 해결하는 핵심요소 중 하나이며, 따라서 동 부문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자유화를 급속히 추진하는 것은 보다 큰 금융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
- 금번 개혁청사건에 포함된 일부 지출항목의 계상 주체 변경(지방정부→중앙정부), 부동산 보유세 확대 시행 및 지방채 발행 허용 등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부채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 -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수입지출의 불균형*을 감안할 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입보다 재정지출 측면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(JP Morgan)
 - * 전체 재정수입중 지방정부의 점유비중은 50% 수준인데 비해 재정지출 비중은 80%에 달함
 - 현재 2개 지역(상하이, 충칭)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보유세의 확대 실시는 지방정부의 안정적 수입원 확충*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동산 버블 방지 및 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 - * 다만, 부동산보유세 확대 시행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단기간내에 지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(Citi)
 - 현행 지방정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대금의 비중을 낮추어 지방정부가 수입확대를 위해 부동산가격을 지지하고자 하는 유인을 축소하고,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킴
 - 부동산 보유 관련 전산망 확충으로 고위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 용이
- 그러나 지방정부의 부족자금 보전방안이 다소 불명확하고 기존 부채의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

(부동산시장 개혁)

- 부동산부문의 경우 부동산보유세 확대 시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새로운 규제는 없으나 동 부문이 중국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아무런 통제 없이 상승하도록 허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
 - 부동산보유세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상하이와 충칭의 경우 부동산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, 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용범위를 엄격히 운영*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
 - * 현재 동 시범지역에서는 신규구입 주택 또는 고급주택에 한정하여 적용
 - 현재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*은 중기적으로 계속 운용할 것으로 예상
 - * 부동산 가격 통제,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각종 제한(양도소득세 부과, 대출제한 등)
- 한편 금번 개혁방안이 부동산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*
 - * 다만, 금리자유화가 전면 실시될 경우 금융비용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도시화 추진과 1자녀정책의 완화는 중기적으로 커다란 신규 주택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
 - 금융개혁의 성공적 추진으로 신용공급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개발업자와 주택구입자의 신용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
 - 부동산보유세 확대 시행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부동산 거품의 위험을 축소시켜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게 할 가능성

[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]

- IB들은 금번 개혁방안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중국 경제의 시스템적 위험을 축소시키고 거시경제의 효율적 운용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
 - Goldman Sachs는 도시화 추진으로 중국의 대도시들이 미국만큼 집적의 경제(economies of agglomeration)가 이루어져 생산성이 높아지면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1%p 상승할 것으로 추정

- Deutsch는 각종 규제완화로 민간기업의 투자가 늘어나 향후 10년간 민간 부문의 실질생산이 연간 3%p 높아질 것으로 추정
- 중국의 경제개혁으로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 증대로 각종 투자가 늘어나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공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
-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해 거시정책들이 덜 완화적으로 운영되고 개혁에 따른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가 위축됨으로써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
- Barclays는 과거 중요한 정책전환이 이루어진 3중전회 이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

중국의 3중전회와 경제성장률



자료 : Barclays

- 주요 IB들은 신 지도부의 이러한 개혁방향을 예상하여 그동안 전세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내년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(평균 2.00%→2.82%, Bloomberg 기준)하면서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둔화(7.60%→7.40%)될 것으로 전망해 왔으며, 3중전회 이후에도 대부분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수준 유지
- 다만, Mizuho의 경우 개혁추진에 따른 긍정적 효과*를 들어 2014년과 2015년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7.3% → 7.6%, 7.2% → 7.5%로 0.3%p씩 상향 조정(11.18일)
- * 1자녀정책 완화, 도시화 진전, 농민의 재산권 강화에 따른 소득 증가로 소비와 투자 확대 등

《주요기관 발표 및 경제지표 일정》

- 중국인민은행, ‘상하이자유무역구 금융부문 지원에 관한 의견’ 발표(12. 2)
- 중국증권감독위, ‘신주발행제도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’ 발표(11.30)
- 중국증권감독위, ‘상장회사 감독가이드라인 3호 - 현금배당’ 발표(11.30)
- 중국인민은행, 2013.10월중 금융시장동향 발표(11.28)
- 중국은행감독위, ‘은행금융기관 임원 및 고급관리자 자격 관리방법’ 공포(11.27)
- 중국인민은행, 2013. 3/4분기 지급결제시스템 동향 발표(11.26)

<참고>

경제지표 발표일정 및 시장 전망치

발표일	지표	발표기관	전망치 ¹⁾	발표치	전기치
11.08 10:37	10월 무역수지	해관총서	\$24.60B	\$31.10B	\$15.21B
11.08 10:37	10월 수출증가율	해관총서	1.7%	5.6%	-0.3%
11.08 10:37	10월 수입증가율	해관총서	7.4%	7.6%	7.4%
11.09 09:30	10월 소비자물가지수	국가통계국	3.3%	3.2%	3.1%
11.09 09:30	10월 생산자물가지수	국가통계국	-1.4%	-1.5%	-1.3%
11.09 13:30	10월 산업생산	국가통계국	10.0%	10.3%	10.2%
11.09 13:30	10월 소매판매	국가통계국	13.4%	13.3%	13.3%
11.09 13:30	10월 고정자산 투자	국가통계국	20.2%	20.1%	20.2%
11.11 16:09	10월 신규 위안화 대출	중국인민은행	580.0B	506.1B	787.0B
11.11 16:09	10월 M2증가율	중국인민은행	14.2%	14.3%	14.2%
11.19 10:19	10월 FDI증가율(실행기준)	상무부	6.1%	1.2%	4.9%
11.21 09:45	11월 HSBC 제조업 PMI(속보치)	HSBC	50.8	50.4	50.9
11.29-11.30	10월 선행지수	국가통계국	-	-	99.64
12.1 09:00	11월 제조업 PMI	국가통계국	51.1	-	51.4
12.2 09:45	11월 HSBC 제조업 PMI	HSBC	50.5	-	50.9
12.3 09:00	11월 비제조업 PMI	국가통계국	-	-	56.3
12.4 09:45	11월 HSBC 서비스 PMI	HSBC	-	-	52.6
12.8	11월 무역수지	해관총서	\$21.30B	-	\$31.11B
12.8	11월 수출증가율	해관총서	5.7%	-	5.6%
12.8	11월 수입증가율	해관총서	6.1%	-	7.6%
12.9 09:30	11월 소비자물가지수	국가통계국	3.2%	-	3.2%
12.9 09:30	11월 생산자물가지수	국가통계국	-1.6%	-	-1.5%

주: 1) Bloomberg 자료

《국제투자은행의 중국 금융관련 주요 조사·연구 내용》

- 지난주 주요 국제투자은행 보고서는 특별한 내용이 없었음